노동 포커스

하도급 산업재해 감소의 가능성과 조건

박 찬 임*

우리나라는 재해 발생률은 낮은 편이지만,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률은 높은 국가이다. 최근에도 중대재해와 관련된 뉴스는 거의 2~3일 간격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건설업, 광산업, 임업 등 특수한 몇몇 분야에서 집중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가 이제는 조선, 제철, 석유화학, 전자, 지하철, 가전 애프터서비스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뉴스를 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협력업체'라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조선 족장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희생자는 협력업체 직원 ○○○씨라는 것이다. 또한 그 사고의 원인은 끼임, 추락, 찔림, 전도, 누출 등 후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가장 중시하고 노력해오던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략은 산업안전공학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또한 하도급 사고는 주로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해 왔기 때문에 하도급 사고 방지에 대한 원청책임을 규율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첨단의 과학이나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의 후진적인 사고이고, 희생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협력업체, 즉 하도급업체의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대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접근방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번 호의 특집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첫번째 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여타 근로자들 사이에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기술통계량으로 확인한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 즉 물리적 위험(진동, 소음, 고온, 분진 등)과 근골격계 위험(반복동작, 기립자세, 중량물 작업 등), 정신적 위험(고객상대, 컴퓨터 작업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여타 근로자들 간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확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쉽게 결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charnim@kli.re.kr).

판단을 전제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근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고나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분석은 2010년도에 실시된 「제2차년도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2015년 시점에서 2010년 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공식통계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조사가 유일하기 때문이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그러하다. 2010년도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식별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항은 조사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후 달라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없다. 향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문제,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이 문항의 복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글은 사내하도급 노동의 어떠한 측면이 산재사고의 다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내하도급으로 위험이 전가될 개연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① 사내하도급 구조 자체가 산재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사례, ② 산재예방의 측면에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원청의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배제와 위험-기피 공정이 사내하도급화하고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것이 산재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사례, ③ 산재보상 측면에서 산재은폐와 공상처리의 강요, 산재보험 적용 불이익과 질병재해의 불인정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 글은 사내하도급 산업안전과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법체계의 포괄성,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참여, 정부의 감독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제도개선 방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안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및 조사·공동 안전교육 실시, 노동감독의 강화 및 작업중지권 고려 등이다.

이번 특집호의 기사가 하도급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